中國의 '東北工程'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황 철 주 (서울 강동 경우회)

지금 우리 방송사들이 고구려사를 소재로 한 대하역사드라마 주몽, 연개소문 등을 국민들의 인기 속에 방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변강역사 여현상계열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 與現狀系列 硏究工程)'의 약칭인데 '동북 변경 지방의 역사와 현 상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종의 프로젝트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과 연합하여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7월에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고구려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고구려 제2의 수도였던 집안시(輯安市)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라고 선전하고, 그곳 주민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구려사를 한국역사라고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적발되면 엄중 단속대상이 된다.

중국은 6.25 참전대가로 1962년에 김일성과 주은래(朱恩來) 간에 체결된 국경조약에 의거 백두산 천지 45%를 차지하였는데, 그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2008년 올림픽 때 이곳에서 성화를 채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은 서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13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일관되게 고구려를 외국으로 인식해 왔고, 자기 나라 역사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수(隋)나라의 역사서인 '수서'와 당(唐)나라의 역사서인 '신·구당서'는 고구려를 중원의 역사와 분리해서 '동이열전'에 기록했고, 송(宋)나라의 '송사'와 명(明)나라의 '명사'는 아예 외국열전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기록뿐 아니라 진시황(秦始皇)이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을 때는 그 북쪽 땅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느닷없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등 각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내 많은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할 경우 고대 6호 16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처럼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동북 3성에는 지린성(吉林省)에 118만명, 라오닝성(遼寧省)에 23만명,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45만명 등 조선족 사람들이 18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82만명이 살고 있는 '옌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韓·中 간에 고구려 옛 영토인 동북 3성의 영유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켜 사전에 쐐기를 박아 두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체제보장을 위해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탈북자가 계속 이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북한을 점령한 후, 북한은 국제법상 남한과는 별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고구려의 연고권(緣故權)을 내세워 자국영토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굳어진다면 남북통일이란 민족적 염원은 산산이 부서지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고착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통일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우신문이 독자 여러분들의
진솔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02-2234-1881

名士칼럼

秩序는 경제발전의 기본!

- 예방 경찰기능 제대로 수행 되어야 -

송 자
(한국 사이버대학 총장)

옛날과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질서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모든 일을 더불어 함께하여야 하는 세상이 되고 보니 사회질서 즉 공공질서의 유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여 공공질서를 순리대로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즉 위기관리나 하는 경찰보다는 사회가 질서 속에서 평안하게 흘러가게 하는 예방경찰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예방경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경찰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한 것일까? 나는 교통질서를 첫째로 이야기 하고 싶다. 교통질서의 혼란은 단순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물류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과 소비양쪽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생산을 못하게 되면 부품공급자들과 근로자들의 소득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가 발전을 하기는커녕 어려워지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하나의 신성 불가침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공공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의사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질서 속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찰은 교통질서를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경제도 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둘째는 노사간의 질서다. 노사가 협력관계가 잘 되어 법질서가 유지되면 공장은 잘 가동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파업이 자주 있게 되면 그 기업은 어렵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파업을 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이제 세계 일등 가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일등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의 GM은 일등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GM의 노조는 회사가 잘 되어야 자기들도 잘 산다는 진리를 잊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세계적인 일등기업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노사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기업들이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노사가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계속 세계 일등 가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일등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일등을 하려면 하나 되는 협력관계의 노사질서가 성립되어야 한다. 노사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나 사용자가 경찰에 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고 느낄 때 잘 하려고 한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셋째로는 환경질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성장하는데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만 강조하다가는 우리가 살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과 공해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환경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발전은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파괴한 환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질서를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 환경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자연친화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 등이 환경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질서와 경제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찰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찰이 좀 더 질서유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질서 없이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우리의 경찰이 예방경찰이 되어 우리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경제발전은 질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八旬의 歸鄕 奉仕

신 주 현 (前 제주도 경찰국장)

어느 덧 80대가 된 필자는 88년에 퇴임하여 그 때만 해도 젊은 열정으로 퇴임 3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 법학부'에 연구원으로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舊소련 정치연구」에 몰두했다. 물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개혁) 정책'으로 소용돌이 치던 시절이었다.

내가 동경에서 대사관 주재관을 하고 돌아간 지 3년여 만에 또다시 동경에 온 것에 대해 일본 경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았다. 당시 가까이 지내던 일본 경찰청 경비국장은 동경대학을 나오고 유럽쪽 여러 나라 주재관을 지냈던 엘리트였는데, 어느 새 경찰총감이 되어 필자를 제국 호텔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는 일반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는데 총감은 거침없이 "신상은 왜 또 일본에 무엇을 하려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제 퇴직하였으니 평소 관심 있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연구하러 왔다"고 답해 주었다. 총감은 수긍하는 얼굴표정으로 "우리는 퇴직 후 그런 힘겨운 일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연구생활을 마치고 정부지원을 받아 '韓·蘇문제연구소'를 창설해 4년간 소련 정치, 경제 연구지를 발간해 주요기관에 무가지로 배부했다.

4년 후 나는 자연인이 되어 주위의 권유로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국 아코디언 협회'를 창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쾌한 아코디언 음악을 보급했으며, 5,6년 후 운영을 후배들에게 넘겼다. 그 후 고향에 한 사람밖에 없던 맏형이 작년 말 98세로 세상을 떠났다. 집안사정이 아무도 이 집에 와서 생활할 후계자가 없었다. 나는 평소 언젠가는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고 싶은 생각에 젖어 있었다.

드디어 2006년 12월 나는 60여년 만에 집사람과 함께 부모님이 물려준 고향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주변에서는 지금 농촌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염려하기도 했다. 물론 舊式인 집은 장남의 도움으로 살기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했으며, 내가 살던 집은 장남에게 물려 주었다.

내가 귀향한 '경북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는 경북 북부지방에 위치하며 문경시(점촌)와 상주시 함창읍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에 인접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순수한 농촌(80세대, 130명)이며 예부터 비교적 빈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은 2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내가 보통학교를 다닐 때의 세대는 불과 20여 세대뿐 할머니들을 주력으로 하는 노약자가 대부분이며, 이 마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 환담하고 단체로 점심식사를 해서 먹는 정다운 풍습이 있는데, 아쉽게도 내가 어릴 때의 주변 동갑내기나 연하의 친척,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또한 젊은 친구는 눈에 띠지 않았으며, 내가 마을의 최고 연장자로서 이사 직후에는 처세하기가 퍽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극복하고 마을회관에 모이는 할머니들의 점심식사에 초대받아 같이 하거나 말동무를 해야 할 기회가 생겼는데 할머니들이 손수 만드는 장국밥이나 비빔밥은 일품이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갈 무렵 이 동리에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다.

동리 앞 4차선 확장도로의 16m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에 문제가 있었다. 4차선 16m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불과 20초. 게다가 교통이 폭주해 교통신호에 익숙하지 못한 마을 노약자들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었는데, 이는 4차선 확장 당시 무리하게 책정된 주행속도 80km 자체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것마저 대형트럭과 승용차, 택시 등은 정지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80km 속도로 그냥 주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마을 교회 목사님이 봉고차에 할머니들을 가득 태우고 동리를 나오다가 과속으로 진행하는 자가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교통신호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 농촌인구의 대거 서울 이동 당시 서울시내의 교통신호에 익숙하지 못한 촌로들의 희생이 많았음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나는 곧 경찰서에 제출할 '교통신호 및 주행속도 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이장, 부녀회장, 주민대표 등 명의로 작성하여 관할 상주경찰서를 방문했다. 마침 서장은 관내 순시 중이었고 署內에는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경무과장이 있었다. 나는 반갑게 경무과장을 만나 자세한 형편 이야기를 했다.

과장은 곧 수긍하면서 내일아침 참모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루어 지겠구나' 하고 기대했으며, 다음날 건의서를 들고 본서 교통지도계 신호담당인 단정한 모습의 김정동 경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김 경장은 건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서 洞民들에게 알렸다.

내가 퇴직 후 경찰서 실무자에게 직접 만든 민원서류를 제출해 본 것은 처음이다. 며칠 후 김 경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호기 기술진과 같이 동리를 찾았다.

동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신호의 상향조정(20초를 29초로)은 간단히 끝났다. 그리고 김 경장은 주행속도 80km의 하향조정(60km)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市당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역시 나 자신도 경찰은 고맙고 주민을 위한 존재임을 느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교통캠페인단'의 활동도 하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교통캠페인단을 보는 일반 운전자들은 모두가 웃음과 환호로 손짓을 하며 지나갔으며, 점차 신호준수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평생 해보지 않던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는 노란 어깨띠에 빨간 모자를 쓴 할머니들도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

앞으로 나는 이 마을의 순박한 노약자들과 친구가 되고, 소수의 학생들과 정답고 오래도록 값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絶對主義를 버리고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不法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급

- 義警은 시위대의 敵이 아닙니다 -

수경 민준기 (서울청 기동단 제 1기동대 5중대)

저 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전의경들은 시위대들에게 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도 과격해 지고 싶지만 아무리 폭력적인 시위대이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야할 시민들이기에 인내 진압할 뿐입니다.

차라리 적이라면 대등하게 싸우기라도 하지, 저희는 스트레스 해소용 센드백과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꼭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나와야만 불법집회입니까? 보호헬멧과 방패를 빼앗아버리는가 하면 몇 명은 어느새 시위대 속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대의 증오에 찬 욕 한마디 한마디, 감정이 실린 발길질과 주먹질에 시달리고 있노라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 모습도 갑자기 떠오르고 끝모를 억울함이 밀려 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듯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시위대로부터 욕 들은 것과 맞은 것을 생각하면 더도 덜도 말고 딱 저희가 당한 만큼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법행위라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있기에 저희는 맞아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상황에서 검거된 사람들은 불법폭력 시위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정도가 극히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때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주고 받던 말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잡혀가도 금방 나오니까 걱정말라...' 몸싸움을 주저하던 시위대 참가자에게 다른 참가자가 했던 말입니다. 명백한 폭력행위로, 공권에 도발하고 기만한 사람들이 소명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니, 현장에서 직접 그 불법 폭력행위들을 지켜본 사람들 중 한명으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신고되는 집회들 중 열에 아홉 정도는 정해진 집회 시간을 훌쩍 넘기고, 불법집회 시위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속된 말로 경찰이 하는 말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지망하려는 경찰의 길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준법집회의 희망이 보인다는 둥 떠들어대지만 진정한 준법집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심정은 분명 시위대를 막아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전의경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불법 집회 시위는 저희 전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각종 불편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경찰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근절될리 만무합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법집행 기관이 좀 더 확고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